

無登錄工場 全面 陽性化

정부는 현재 7천8백여개에 달하는 무등록공장을 내년 4월까지 양성화한다는 방침아래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9월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4천2백29개를 비롯하여 총 7천8백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전국의 무등록 공장을 내년 4월까지 적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통해 양성화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건설부·환경처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안에서 상공자원부는 89년 이전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추가공장등록을 실시하며 기존의 이전 및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중 조건미이행공장과 무등록공장중 추가 등록된 공장은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정상등록공장등 4종

류로 분류, 정상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즉시 공장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 또는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조건 이행기간을 추가하며 이전명령 발동 공장은 조속 이전토록 명령조치했다.

특히 상공자원부는 공장등록 기준을 단순화하여 공장등록의 무를 완화, 무등록공장의 등록을 유도하고 조건부 등록공장 대책

협의회를 구성, 무등록공장의 신규발생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등록공장의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적극 나서 토지관련제도를 개편 이전공장입주를 위한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아파트형 공장 건설활성화 대책을 수립, 수도권 신도시 및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추진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입주를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총 3백 92억 원의 자금을 조성, 아파트형 공장입주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開發技術 事業化 本格推進

정부의 개발기술 사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자금과 연결되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5월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을 고시하는등 이분야의 활성화에 주력해 왔는데 최근 우수기술 업체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나섰다.

이와관련, 공진청은 최근 효명

컴퓨터·무지개전자·제일조명공업 등 7개 업체에서 개발한 7개 품목을 우수기술로 평가해 신기술 사업화자금지원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우수기술로 평가된 제품중 효명컴퓨터의 컴퓨터 자동백업장치, 무지개전자의 원격지시용 유기액체온도계, 제일조명공업의 절전형 래피드 스타트식

형광등, 알미늄코리아테크의 알루미늄 에칭박등 4개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마크(NT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진청은 사업화자금지원업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협진광학등 47개업체로부터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의뢰를 받아 심사중에 있는데 금년중에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이와별도로 상공자원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화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금년도에 공업발전기금등을 활용하여 3백억원의 자금을 조성,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집중지원하는 한편 공업발전기금내에 사업화지원자금을 별도로 마련,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기술사업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원기관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비관세 장벽의 형태와 성격도 매우 번잡해지고 있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0.19%의 세관이용 수수료와 「바이 아메리칸법」등 차별적 정부조달관행, 통상법 301조 등 일방적인 무역법등이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됐으며 EC·캐나다 등도 반덤핑 관세를 수입제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원산지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멕시코·헝가리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제소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 검사제도, 수입수량제한 및 허가요건 강화등을 통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안**

非關稅 障壁이 深刻한 貿易障壁으로 擡頭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각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貿公이 17개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보호주의적 경향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민원불편 직소전화 설치

공업진흥청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체 및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건의와 불법·부당한 처리 및 비위등을 신고하며, 산업표준화법등 5개 법령상 행정규제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민원불편 직소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공업진흥청장이 해당국실(기관)에 직접 지시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최단시간내에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니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번호 : (02) 502-0110